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박 영 숙 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Ⅰ. 21세기에 대한 특성과 전망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2년 8개월 앞두고 있다. 새 세기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묵은해를 반성하고 오는 해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연례적인 송구영신의 의미와는 다른 감회를 느끼게 한다.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세대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 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의 내용을 검토하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와 잠재력을 점검해 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세계는 21세기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①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②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요인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③지방화의 추세이다. 세계화과정에서 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며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④21세기의 삶은 물량적인 것에서 질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1995년 1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화 구상>을 위해 구성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펴낸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는 새로운 가능성과 폭발적인 위험이 교차하는 전환기라고 하고 있다. 인류가 일찍이 지금처럼 인간을 전면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수단과 또한 전체 인류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보편적 수단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21세기는 인류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처럼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높은 때는 일찍이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작금 벌어지고 있는 한보·삼미사태, 중소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민생과 민복과는 거리가 먼 권력게임에 사로잡혀있는 정치권, 부정부패와 각종 부조리로 중병에 걸려있는 사회현상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기국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시태세로 임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1세기 국가비전과 목표를 우리 나라를 세계의 중심국가 또는 세계의 모범국가 건설로 설정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21일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에서 보면 대통령은 우리 나라를 21세기에 세계중심에 선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 환경모범국가를 만들기 위해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표와 구상이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극복의 책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과제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게만 내맡길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정치권과 관료층,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체제구조에 국민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 없는 시대이며 체제적 관성만을 갖고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안전, 환경, 통일, 복지 등의 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체제외가 나서서 사회적 눈, 사회적 손, 사회적 권위에 의하여 체제관성이 감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시대가 정통성 있는 권력을 형성하는데 치중했다

면 지금부터는 정당성 있는 사회의 형성과 사회의 조직화에 그 무게중심이 이동해있는 시대이다. (이신행, 연세대, 1995)」라고 한 것이 한 예가 된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체계는 공적영역(Public Sector)으로서의 정부, 민간영역(Private Sector)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제 3영역(The Third Sector)으로서의 시민사회의 3개 영역이 어울려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자율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이며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이들 3자간의 동반자관계(Partnership)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회는 공동체사회가 되는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는 중앙집권적인 사회체제가 아닌 분권화된 지방자치제에서 보다 실현 가능하다. 지난 6. 27 지자제 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시민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2년이 가까워온다. 과연 시민사회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는 것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일의 중요과제가 된다. 시민운동이 제대로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예방하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Ⅱ. 21세기의 삶의 질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은 물량적인 것이었다. 21세기의 삶의 내용은 질의 문제이다.

런던대학의 경제학교수 폴 에킨스(Paul Ekins)의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보면 오늘의 세계의 당면문제로서 ①군사화와 전쟁의 위협 ②빈곤 ③인권탄압 ④환경파괴 등을 들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환경과 직결되어 있고 이들의 해결은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전쟁은 빈곤과 환경파괴를 가져오며 따라서 인권탄압현상이 발생한다. 환경파괴는 빈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빈곤해결을 위한 개발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오늘의 역사는 낡은 세계질서가 한계에 봉착해 붕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는 새로운 시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다. 세계는 지금 1980년대의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를 향해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보전>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73.50%의 국민이 오늘의 세계문제로 환경문제를 꼽고 있다. 우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조사에서도 환경문제<일반국민 88.3%, 여론주도층 92.1%)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빈부문제(68.9%와 6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일반 88.5%, 여론주도층 94.8%)과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제품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86.1%)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우리 나라의 국정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한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96. 3 89.8%(일반) 95.3%(전문가) - 수질, 대기, 자연녹지, 쓰레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96. 11 서울시민 95.5% - 공기, 쓰레기. 교통, 물)

① 쾌적한 환경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환경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오늘의 생산과 소비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구증가, 도시화, 빈부의 문제 등이 지구환경문제를 더욱 악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지구환경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파수꾼이다.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지구시민 개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작은 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실천하는데서 풀린다. "지구적으로 생각하

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표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과소비 자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가 과소비 억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다. 반면 우리 나라와의 통상관계에 있는 자국의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제대국들의 수입규제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소비 자제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생활양식의 제일 큰 덕목이다. 이 덕목은 우리만이 아닌 지구시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과소비자제 운동과 관련한 통상국들의 수입규제라는 반발에 대해 단지 민간단체의 운동으로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라고 대응해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이룩한 우리들을 지배해온 핵심가치는 더많이, 더빨리, 더편리하게 였다.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세계자원을 소모하는 다소비국(GNP $7500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1만불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적·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을 계속하는 한 지구는 존속할 수 없다. 그것은 지구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억 인구의 중국이 기존의 발전모델에 따라 경제성장을 하여 국민 1인당 소비수준이 로스엔젤레스 빈민층의 소비수준에 이르려면 산술적으로 지구 만한 행성이 4~5개나 더 필요하다고 한다. (성장의 한계, Meadows, 1972, 뉴욕 Univers Books)

② 공동체사회 건설

21세기의 우리의 삶은 물질 대신에 삶의 질 추구가 목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남을 희생시키는 개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만든다기 보다는 회복하는 것이다. 공동체사회는 도시화과정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6. 27 지방자치선거 이후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민자치제는 공동체사회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은 싹트고 자라게 된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체들이 각기의 지역사회를 살맛 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틀이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한바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에 의거 <지방의제 21>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필히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각 행위자의 실천의지가 담겨야 하고 그 실천지표는 행위자 각기가 설정해야 한다. 개개인의 실천이 필수적이다. 모두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데서 <환경공동체>는 건설된다.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파수꾼이다. 가해자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한다. 여기에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들어가기도 한다. 혼자서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소집단으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에코가족운동>[1]이나 <아나바다운동>[2]이 그런 점을 감안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

1) <에코가족운동>은 환경의식을 생활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운동으로서 혼자하기 힘든 녹색생활을

환경청이 조사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1987년도에 이미 91% 이상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서울시민의 환경의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은 95.5%가 서울환경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좀처럼 나아질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천이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서울시민의 87.7%가 환경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에서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생활태도에 변화가 오고 그 결과 실천행위를 유발해 내는 것은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힘이다. 외국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환경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피해자로서의 책임은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를 살맛 나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시작으로서 최근의 모범적인 사례 중에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 12월 6일에 서울 YMCA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이 은평구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살기 좋은 은평만들기 구민토론회>이다. 이 행사는 지역단체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쾌적한 내고장 만들기 작업을 했다는데 있다. 그리고 그 진행방법도 돋보이는 것이었다.

이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은평지역사회를 위한 전문가의 기조발제와 은평구민의 설문조사 발표 그리고 시민제안이 이어지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시민제안은 환경, 지역문화, 청소년교육, 생활안전, 사회복지 등의 5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 토론회의 특색은 각 부문의 발제를 순수주민대표들이 담당한 점인데 이들은 주부들로서 은평구의 생활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 이 토론회는 주민들만의 의견발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자체의 각 분야 담당공무원들이 해당부문의 자치체 정책과 의견수렴의 뜻을 격의 없이 개진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종래의 행정부의 권위적이며 방어적이며 은폐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향후 지역사회 만들기에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일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민자치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은 지역주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종래의 행정에 관한 한 주민은 수혜자의 자리에 아니면 통치대상, 관리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방

소집단(이웃, 직장, 학교, 취미모임, 또는 교회·성당·사찰 등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5~8명으로 팀을 구성한다)활동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의 진행기간은 6개월이다. 내용은 첫달-쓰레기줄이기, 둘째달-물아껴쓰기, 셋째달-에너지절약하기, 넷째달-자가용덜타기, 다섯째달-자원절약하기, 여섯째달-종합평가하기로 되어 있다. 이 운동은 녹색생활의 실천방법을 연구·실천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스스로 행동목표를 세운다.

이 운동은 유엔 환경 계획(UNEP)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의 과정에 대한 자가평가에 따라 일정수준의 성과를 거둔 가족에게 지구시민권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이 운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한국사회교육원 744-3964)

2) <아나바다 운동>은 물건을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꾸어쓰고, 다시쓰는 자원절약운동이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자원다소비국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물건을 살 때부터 시작된다.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 내구성이 강한 물건선택, 폐기시의 재자원화가 가능한 상품구입, 재생상품우선구입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폐기물 양을 줄이고(Reduce),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며(Reuse),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처리하며(Recycle), 재생상품을 구입하며(Rebuy), 고장난 것은 고쳐서 사용(Repair)하는 등의 R운동으로 서구에는 알려져있다.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품상점(Reuse Shop)을 운영하고, 자주 쓰지 않은 물품의 임대사업을 하거나 공동구입·공동사용·공동관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운동이다.

싼값으로 물건을 파는 미국의 알뜰시장(Thrifty Shop),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앞마당장터(Garage Sale), 쓰던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교환시장(White Elephant) 등도 이 운동에 속하는 형식이다.

우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바자회나 벼룩시장과 다른 것은 임시로 열리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상점으로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물건의 가격도 원칙에 따라 부여되고 운영은 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수익금은 주로 자선사업에 쓰여진다.

자치개막과 더불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행정(삶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한 선언을 선언으로 그쳐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의 행정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닌 경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행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참여방식은 지역사회여건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

환경보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은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 대상은 생산업체일 수도, 정부시책일수도 이웃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은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다.

21세기의 삶의 질의 향상은 가해자로서는 소비억제, 피해자로서는 살맛 나는 내고향 만들기, 파수꾼으로서는 환경오염을 감시하며 기업과 정부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정책을 촉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인3역을 제대로 해내게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몫이다.

삶의 질이란 개인에 따라 지역특성과 국가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향후 우리의 삶의 질 향상 노력에 큰 변수로서 작용할 남북의 통일문제 그리고 오늘의 북한의 현실문제에 대해 현명한 대처 및 대비가 필요하다. 독일통일에서 보여진 선례에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

Ⅲ. 오늘의 시민운동

오늘의 세계에서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시민사회의 저해요인 또한 엄청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현실파악이 중요하다.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은 사회의 불평등문제와 시민들의 공익의식 결여로서 공동체사회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의 역사는 길지 않다. 때문에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우리의 권리확보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모든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과 관련한 문제로서 경실련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일을 계기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각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체제 외의 시민운동이라고 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유일한 대안은 시민사회와 건전한 시민운동이라고 식자들은 말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이 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80년대를 통해 성장한 시민사회라고 생각된다. 87년의 민주화투쟁, 최근 노동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부당성에 대해 보여준 풀뿌리 문제제기, 그리고 활발한 자생적 시민운동단체 등은 시민 혹은 시민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 김철규, 고려대, 1997)」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오늘의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권위(정당성과 신뢰성)와 힘(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YMCA는 우리 나라에서의 시민운동의 효시로 부각되어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인재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이념과 존재양식도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론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시민운동에서 보여지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3월 24일자 한국일보의 <시민단체의 자기개혁>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자.

이 논설은 80년대 후반 기존사회운동의 명백한 한계 속에서 제도정치권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시민단체들은 90년대 초반 한때 우리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소수의견, 반대견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의 시민단체들의 입지확보는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시민단체의 사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형상의 덩치는 좀 커졌는지 모르지만 위상은 반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나라에서 시민운동의 위상제고는 시민단체들의 자기개혁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①대중성의 제고 ②내부문제(재정확보, 양질의 인력 충원 및 유지)의 해결 ③조직과 구성원의 도덕성 견지 ④민주적 운영 등을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벌써부터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오랜 전통과 재정기반을 갖추고 있는 YMCA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YMCA의 자성은 YMCA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이행보다 기관유지를 위한 수익성 사업운영에 치우쳐고 있는데서 운동성이 약화되고 기관화해가는 경향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YMCA와 자매기구인 YWCA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의 눈에 비친 최근의 환경운동·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운동전개에 있어서 자발적인 회원 대신 유급 실무자에 의한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사결정과 운동전개과정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운동의 원리는 파급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오늘의 운동양상은 일과성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크다. 그러한 운동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첫째 많은 수의 실무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막대한 경상비 지출로 운동의 순수성·도덕성 유지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운동체의 기구가 확대되면 내부업무집행의 활로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참여기구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게 되어 무보수 참여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사업에 불과하다. 둘째로 운동체들이 저마다 사건은 많이 터뜨리는데 비해 실제로 거둬지는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또하나의 문제는 사회운동이 소수의 명망가 위주라는 것이다. 매스컴에 비친 행사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같은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회운동의 취지는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으나 같은 몇 사람이 모든 운동의 얼굴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운동이란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많은 새 사람들이 가담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과정을 거쳐 시민에 의한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란 있을 수 없다.

민간단체의 신뢰성 문제가 심판의 자리에 오른 차제에 시민운동은 반성을 거쳐 자기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전 YMCA 사무총장인 강문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운동의 체중을 줄이고 거품을 빼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한다.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시민운동의 도덕성, 신뢰성 확보, 재정충당 방안,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시민운동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Ⅳ. 시민운동으로서의 YMCA의 과제

YMCA는 시민운동으로서만이 아닌 기독교운동, 에큐메니컬운동, 청년운동, 회원의 운동, Volunteer운동, 농촌운동, 지역사회운동, 국제적운동 등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운동체이다.

YMCA는 본래 소집단 활동(개미군단 형태의 저변확대 필요)을 토대로 이루어진 운동체로서 시민의 민주훈련의 장의 기능도 담당해온 것으로 안다.

오늘날 YMC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단한 것이다. 창설이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쌓아놓은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지도력 그리고 영향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자산을 YMCA만을 위해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바로세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충남지역 YMCA가 각기 지역사회에서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양식 개혁운동 (소비억제)
- 에코팀운동 ┐
- 에코가족운동 ┘— 소집단활동 지역사회조직 구축
- 아나바다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

② <살맛 나는 내고장 만들기> 운동
- 삶의 질 지표
- 내고장 환경지도
- <지방의제 21> 수립
- 내고장 녹화운동 (영국의 Ground Work 등)

③ 지방행정에 참여하자.
- 지방정부에 주민위원회 구성요구
- <주민회의> 또는 <민회> 등의 대정부 민간주체구성
- 행정부의 주민참여는 Partner로서
- 서울의 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 설치운영-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④ 도·농간의 공동체회복운동을 전개하자.
- 유기농산물 직거래(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운동을 결해서)

⑤ 선거국면에 바로 대처하자.
- '97 대통령 선거
- '98 지방자치제 선거
- 2000년 총선

⑥ 통일국면에 바로 대처하자.
- 굶주리는 동포문제(YMCA전국연합에서 하고 있다)
- 민족동질성회복
- 불시에 찾아올 통일 대비

V. 맺는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막강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YMCA가 기독교정신으로 결단만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었던 좋은 피조물들이 오늘날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창세기 6:7)"라는 하느님의 한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 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에서 YMCA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한국인으로서의 책임, 지구인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느님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지역기 삶의 질향상과 시민운동

I 들어가는 말

세종 삶의 양식 창조 힘도

Ⅱ 21세기 삶의 길 정보화로, 빨라진 계속 증대 물질보다 중심으로 정신 추구

21세기 전망

생활수준 향상으로 ~~경제, 정치, 사회,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 때로는, 갑자기 확인과, 능력

(1) 인구, 도시구조의 변화 IBGO로 이루 고속성장이루 한국인을 도리어 해치는(더불어, 더불리) IP로 우리 200만구 200만을 80%지금

(2) 환경오염 안전, 환경, 에너지, 식량(은퇴 퇴직대비)

(3)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불안

공동체적 삶

환경 보전 — 개개인의 책임없이 불가 시민운동

21세기 - 동서방진 → 남북전쟁 확률적 예측

우리상황 — 이를 대전을 위한 정보로 → 인류 생태계 지키기

민족적, 국익적 — 세계 정치, 경제, 사회구조

국경이 없는 세계

앞으로 북한, 통일 정권이 되면 지구촌 속 최강국

중국인구 12억 LA 최저생활수준 4~5개의 지구 필요

21세기의 인식:

과거의 위대한 문명의 토대를 가능케 하고

현재 세계의 최이익 최대는

세계의 최대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생존, 번영 공통의 목표

지배적 개념

국내정치

리더로서

경제, 인구의 불리 위기 경고

<보리밥이> → <보리밥에 고추장 보리죽에>

풍요적 개발 → 자연생존위한 환경파괴

인간복지 → 인간복지대에게 이르러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구조

21세기 삶에는

지구촌 방향 정보화 사회적 인간적의 필요

세계관, 정보관, 기업관 의식

풍요속의 물질 빈곤의 역설

경제성장 - 중점을 잃어 세계속의

개개인 생활에 목적 이르러

산업화된 국가에 대한 삶의 길 들어는 이 내용을 고려

III 환경의 시대운동

개념의 시대적 계기를 통한 환경의 시대운동 이해

환경운동 — 실무적 운동
시민운동 — 동일한 운동

운동양식 강조점로

운동체 차원적에 운동의 목표

시대운동의 상실

재정고갈로 20%가 휘고 — 재정이슈

Community 정치적 정체성

경제생활의 환경의 가능 > IMF이후

중독되는 수입의 Pay 개념적 선

국가와 시민의 인식의 문제

시스템의 공익의식 결여

정경유착에서 완충역할, 중간매개로서의 시민단체

정권보기위해서 과거를 돼돌아보면

정치인에게 위기극복하라 기대하는 — 투표에서 행사하는 유권자의 역할

공동체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살고있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 김학주, 고려대, 사회학 교수, 출처 P4-3-17

역사를 시대에 맞는 역사로 고치고 필요한 이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80년대 중반 통해 형성된 시민사회라고 생각한다

80년대의 민주화 투쟁, 학생운동, 노동자 농민 시민의 분당성이 대체로 보여준 돌파구적 모델이기,

체제형 시민운동 (P41P 지역운동 이슈화)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 생활을 바꾸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현실안주의 틀을 깨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시민운동은 모델을 보고 체질을 강조하는 데에서 벗어나 체질을 방향으로 시민운동이 가져야 할 개념을 확실히 해야

공동체 살리기 예 — 투표의 유권자 부응하는 시민운동

공동체의 정당성의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

YMCA – 세계흐름과 흐름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관계)

IV YMCA운동의 거는 기대

YMCA가 가져야 할 과제: 정치에 대한 흐름과 리더십에 대한 흐름을 파악
기독교 운동의 흐름에
(신학적)
공산주의, 도덕성, 전통주의, 영향력 크게 받고 있다
YMCA 또한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NGO의 공통과제
청년운동 리더십
기계가 Human ware의 역할 기능 (인재개발의 필요 사람에 대한 투자)
또한 흐름에 Pro적 참여흐름의 영향에 크게 받고
자원의 운동의 흐름에
Volunteer운동 노동관련 (관광에 봉사활동) 최근에 대한 흐름 – 취업난에 따른 흐름이다
(사회) YMCA운동 리더십 (Volunteerism) 인재개발
사회참여흐름, 공동체 회복
기술 테크니컬 인적자원 중심개발
봉사운동 리더십 – 도농공동체 회복
사회교육, 유기농, 도시재개발,
국제적 운동 리더십
(유엔의 인정하는 NGO)
NGO의 흐름 (국제 EPR가) – 국제적 초점이슈
국제 세계 경제 (지구는 국제인데 세계는 국제가 아니다. 환경문제에 우선적으로)
국제적 초점 해소목적
리더십과 더불어 운동

건전한 세계의식 –
↓ 건전한 흐름이 문제이해 해결을 세계의 대응할 수 있는 힘이다.

청년운동 리더십 참여시기
운동리더십 기준의 선택?
최대 선교 – 운동리더십
리더십 개발 기준의 선택
최대운동리더십
대학생 중심
민족주의 운동

사회운동형 Associate in 국제적 개념
개념의 교육과 국제세계 –
개인의 리더십을 이론적 개념 정리한다

스태프 Pro
개념 수립

운동체적으로 국제이슈에 대한 리더십과
개개인의 내면 운동이념의 전문개발
최소화 이루어져야

V 시민운동의 주체의 과제 (3R의 특성과 — 환경 시민운동의 과제

life style 개혁 —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 Eco Team 운동 대량소비적 소비생활 양식
의식+실천 의식개혁에 머물지 않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과제. 어떻게 바꿀것인가?

상생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의제 21) 실천적 생활운동 시민운동

지역차원 정책에서 강화 대량폐기 구축 분리배출 신고

선거국면에서의 과제 ('97 대통령 '98 지방선거 2002년 총선)
정책생산역량과 블리딩 이미지 (정치적 무관심)

홍일국면에서의 과제 (쓰레기는 증가, 인적동원의 취약 홍일증후

도농간의 공동체 회복 (쓰레기 상생전략 예고)
유기농 생산물 직거래 — 유통체계 구축

VI 맺는말

시네시스 = 공룡행동 (몸짓) 소리행동 (기억, 기술) 차이의
존재하는 증강메커니즘

증강메커니즘 = 재생성, 공생성, 메타인식성, 지속성
인지

방관체제이론 : 재생적 지식으로
관찰으로
판정하으로
생성으로

세계관의 공존

보편적으로 세계에 수많은 실체들
존재함
소비주의 문화 — 시네시스 방해적 체제
시장경제주의 — 토착적 지식체계와 대립

시민운동의 종언 — 단일이론

운동이해방식 ① 개인이익 확보에서
② 집단 갈등에서
③ 단일 이론으로 재생적으로 접근하

재난으로서의 지식은
끊어진 것 회복 — 반복학습적 올바
시네스틱 (지식의 공진적 획득의 모델)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의장/미래학자

I 21세기와 시민운동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시점에서 우리를 걱정하는 세대와 우리에게는 어떻게 21세기를 바라보고 21세기를 맞을것인가 하는 과제와 부딪히고 있다.

세계는 21세기를 ①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국경이 없는 새로운 지구촌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패러다임 ② 20세기와 전혀 다른 21세기에서는 환경의 위기로서 자연을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③ 정보화가 확대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의 증가로 지방화 국제화가, 경제가, 민간조직등 시민자치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 체계는 공공영역(Public Sector)으로서의 정부, 민간영역(Private Sector)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제3영역(The Third Sector)으로서의 시민사회의 3개 영역이 어울려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원국이냐 상호보완적이냐 갈등하는 가운데 협력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이를 두고 동반자관계(Partnership)가 세대를 이루어 가는 21세기 우리의 사회는 더욱더 넓은 광의의 것은 공동체사회가 되는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공동체사회는 분권화된 지방과 지방에서 보다 실현가능하다. 그런의미에서 6.27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 = 시민자치의 개막은 지방화 시대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하겠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직 시민사회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는것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일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1995년 유엔사무총장의 〈세계화 구상〉을 위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세계화의 미래와 공동체〉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는 세계은행과 통화기금의 위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라고 하고 있다. 21세기는 인류에게 위기의 동시에 기회와 희망을 주는 시대.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화와 국제화 지방화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높은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등에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 상황 극복의 길은 우리가 추구해 온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치구조와 경제 그리고 경제 개념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처리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체제의 내부의 상태를, 외부의 충격,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체제 안정이 깨지려고 한다. 이러한 외부의 충격을 환경이라고 하고 체제가 환경에 적응하고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 과정을 이중에 의한 피드백」(이신행, 엔지니, IPPS)라고 한다.

Ⅱ 21세기의 삶의 질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삶은 파괴된 환경과 더불어서는 공동체적을 주목으로 하는 '질의 문제'이다. 세계는 지금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를 향해 옥내의 환호성과 더불어 새로운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 환경 보전〉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약 8P.8%와 성인의 약 P5.3%(환경환경기술개발원 '96.3)가 앞서 세계 문제로 환경문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삶의 질향상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뜻을 두어야 한다.

22세기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 있다. 환경문제의 1차적 원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오늘의 생산과 소비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인구증가, 오염, 빈부의 문제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기여자로 있다. 우리모두는 지구환경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셈이다.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의 이름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데는 틀림없다. 더럽혀지게 했고 우리나라 1PP21조원의 20%의 생산자인 전 국민의 80%의 생산자로 소모하는 대량생산으로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제 더이상 물질·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있다. 지금까지의 같은 성장을 계속하는 한 지구는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세계는 오늘날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결국 종래의 물질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생활양식의 채택은 당연이고 우리정부는 이것 하나를 미루어 보더라도 지금 운동과 관련하는 종양국들의 수입규제라는 따돌림에 대처 관리 인간관계의 운동으로 정부와 우리국민 모두가 노력할 것이 아니고 정부 당국자의 환경친화적 생활운동이라는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한편 파괴적인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체를 공동체 의식을 확립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리빙과학자들이 같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이 IPP21조 미국에서의 지속가능개발협의회 환경친화적인 기업체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게 위한 행동계획으로 〈의제 21 - Agenda 21〉 에서 〈리빙의제 21〉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을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즉 지역주민,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각 행정기관의 실천의지도 담겨야 하고 그일을 주민들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 작업은 〈환경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은 주민자치이다. 지역주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종래의 행정이 관료적 주체는 주민들의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관리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행정(삶의 질을 만드는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지방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보전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기 책임을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생산위해요소도, 공무위탁업무도, 이웃이 협조를 얻고 환경을 보존하게 지켜낼 것이다.

지역사회 모두는 누구나 1인 3역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지방자치의 몫이다.

환경의 관리와 함께 향후 우리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큰 변수로서 대두가능한 문제로 녹색운동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오늘의 지방운동

오늘의 세계에서 지방자치, 지방운동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해 드릴 필요가 없다. 벌써 지방자치의 위력으로 많은 업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지방운동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현재 지방들이 지방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운동을 지방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서 들리는 정신적 혁명의 도래가 들렸다고 할 지방단체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방자치의 지방운동이다. 역사를 바꾸는 힘이 위원한 대안은 지방자치와 지방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의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지방운동이 220 지방에서 동일한 목표 공통점을 가진 한의(정당이 아닌 단체) 및 회(행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월 24일 한국환경의 〈지방단체의 자기개혁〉이라는 제하의 보고에서 보면 80년대 후반 지방자치운동의 영향은 한계속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르지 않아 실로 심각한 지방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민자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공공재정 서비스 등의 소득이전, 보조금제도 등 부분적 지방단체들에 있어 참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속에서 시니어층에의 지향은 이미 시작이 늦었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커뮤니케이션 모델 관점은 다양한 시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층에의 커뮤니케이션 시니어층에의 고기능 개발의 내용으로는 ① 대응형 ② 네트워크(재화 창출, 양질의 인적 교류 및 유지)의 해결 ③ 조직과 개인의 도덕적 결과 ④ 시장 운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시니어층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문제들이며 최근의 환경운동,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최근의 고발정신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는 엘리트층의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로인해 운동에의 이미지와 운동참여자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운동은 수의 실체를 필요로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로 운동의 활성화 도모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운동이 이제 대중에 불과하다.

또하나의 문제는 오늘의 시니어층이 소수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시니어들이 모두 시니어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에는 지속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과성 행사로 끝이는 운동은 이루어 의미가 없다. 시민운동에는 많은 시니어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 시민운동은 시간이 경과함으로 참여자들의 시니어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의 시민의식 문제가 심각한 과제이 오늘 한국에 시민운동을 방향을 제시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 NGO로써 다수 등장한 강물속 시니어층에 적극적 참여를 대중도 시민운동의 취지를 수리고 거듭된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민운동의 리더확보, 도덕성·신뢰성 확보, 재정충당방안, 조직인적 확보등으로 시민운동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 해야 한다.

Ⅳ 시민운동에서의 NGO의 역할

NGO는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는 여러 비영리조직, 환경운동, 여성운동, 빈곤퇴치운동, 농촌운동, 지역개발운동, 국제운동등의 분야를 가리고 있는 운동체이다.

NGO는 지금까지 소외된 활동 (개발도상 국제의 지역조직)을 토대로 이루어진 시민의 운동체로서 시민의 인권보호의 장의 기능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날 NGO가 가리고 있는 역할은 대단한 것이다. 정부이래 취약한 지리적 특성이 축적한 빈곤, 공해문제, 도덕성, 전염병, 기후변화 그리고 재해 등등이 내포 그것이다. 이러한 NGO는 위해 옳바른 동지이 이내로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박 영 숙 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Ⅰ. 21세기에 대한 특성과 전망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2년 8개월 앞두고 있다. 새 세기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묵은해를 반성하고 오는 해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연례적인 송구영신의 의미와는 다른 감회를 느끼게 한다.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세대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 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의 내용을 검토하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와 잠재력을 점검해 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세계는 21세기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①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②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요인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③지방화의 추세이다. 세계화과정에서 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며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④21세기의 삶은 물량적인 것에서 질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1995년 1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화 구상>을 위해 구성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펴낸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는 새로운 가능성과 폭발적인 위험이 교차하는 전환기라고 하고 있다. 인류가 일찍이 지금처럼 인간을 전면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수단과 또한 전체 인류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보편적 수단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21세기는 인류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처럼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높은 때는 일찍이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작금 벌어지고 있는 한보·삼미사태, 중소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민생과 민복과는 거리가 먼 권력개임에 사로잡혀있는 정치권, 부정부패와 각종 부조리로 중병에 걸려있는 사회현상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기국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시태세로 임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1세기 국가비전과 목표를 우리 나라를 세계의 중심국가 또는 세계의 모범국가 건설로 설정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21일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에서 보면 대통령은 우리 나라를 21세기에 세계중심에 선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 환경모범국가를 만들기 위해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표와 구상이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극복의 책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과제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게만 내맡길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정치권과 관료층,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체제구조에 국민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 없는 시대이며 체제적 관성만을 갖고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안전, 환경, 통일, 복지 등의 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체제외가 나서서 사회적 눈, 사회적 손, 사회적 권위에 의하여 체제관성이 감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시대가 정통성 있는 권력을 형성하는데 치중했다

면 지금부터는 정당성 있는 사회의 형성과 사회의 조직화에 그 무게중심이 이동해있는 시대이다. (이신행, 연세대, 1995)」라고 한 것이 한 예가 된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체계는 공적영역(Public Sector)으로서의 정부, 민간영역(Private Sector)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제 3영역(The Third Sector)으로서의 시민사회의 3개 영역이 어울려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자율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이며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이들 3자간의 동반자관계(Partnership)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회는 공동체사회가 되는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는 중앙집권적인 사회체제가 아닌 분권화된 지방자치제에서 보다 실현 가능하다. 지난 6. 27 지자제 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시민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2년이 가까워온다. 과연 시민사회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는 것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일의 중요과제가 된다. 시민운동이 제대로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예방하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Ⅱ. 21세기의 삶의 질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은 물량적인 것이었다. 21세기의 삶의 내용은 질의 문제이다.

런던대학의 경제학교수 폴 에킨스(Paul Ekins)의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보면 오늘의 세계의 당면문제로서 ①군사화와 전쟁의 위협 ②빈곤 ③인권탄압 ④환경파괴 등을 들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환경과 직결되어 있고 이들의 해결은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전쟁은 빈곤과 환경파괴를 가져오며 따라서 인권탄압현상이 발생한다. 환경파괴는 빈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빈곤해결을 위한 개발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오늘의 역사는 낡은 세계질서가 한계에 봉착해 붕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는 새로운 시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다. 세계는 지금 1980년대의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를 향해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보전>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73.50%의 국민이 오늘의 세계문제로 환경문제를 꼽고 있다. 우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조사에서도 환경문제<일반국민 88.3%, 여론주도층 92.1%)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빈부문제(68.9%와 6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일반 88.5%, 여론주도층 94.8%)과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제품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86.1%)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우리 나라의 국정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한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96. 3 89.8%(일반) 95.3%(전문가) - 수질, 대기, 자연녹지, 쓰레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96. 11 서울시민 95.5% - 공기, 쓰레기, 교통, 물)

① 쾌적한 환경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환경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오늘의 생산과 소비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구증가, 도시화, 빈부의 문제 등이 지구환경문제를 더욱 악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지구환경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파수꾼이다.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지구시민 개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작은 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실천하는데서 풀린다. "지구적으로 생각하

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표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과소비 자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가 과소비 억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다. 반면 우리 나라와의 통상관계에 있는 자국의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제대국들의 수입규제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소비 자제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생활양식의 제일 큰 덕목이다. 이 덕목은 우리만이 아닌 지구시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과소비자제 운동과 관련한 통상국들의 수입규제라는 반발에 대해 단지 민간단체의 운동으로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라고 대응해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이룩한 우리들을 지배해온 핵심가치는 더많이, 더빨리, 더편리하게였다.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세계자원을 소모하는 다소비국(GNP $7500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1만불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이상 물적·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을 계속하는 한 지구는 존속할 수 없다. 그것은 지구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억 인구의 중국이 기존의 발전모델에 따라 경제성장을 하여 국민 1인당 소비수준이 로스앤젤레스 빈민층의 소비수준에 이르려면 산술적으로 지구 만한 행성이 4~5개나 더 필요하다고 한다. (성장의 한계, Meadows, 1972, 뉴욕 Univers Books)

② 공동체사회 건설

21세기의 우리의 삶은 물질 대신에 삶의 질 추구가 목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남을 희생시키는 개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만든다기 보다는 회복하는 것이다. 공동체사회는 도시화과정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6. 27 지방자치선거 이후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민자치제는 공동체사회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은 싹트고 자라게 된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체들이 각기의 지역사회를 살맛 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틀이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한바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에 의거 <지방의제 21>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필히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각 행위자의 실천의지가 담겨야 하고 그 실천지표는 행위자 각기가 설정해야 한다. 개개인의 실천이 필수적이다. 모두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데서 <환경공동체>는 건설된다.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파수꾼이다. 가해자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한다. 여기에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들어가기도 한다. 혼자서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소집단으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에코가족운동>[1]이나 <아나바다운동>[2]이 그런 점을 감안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

1) <에코가족운동>은 환경의식을 생활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운동으로서 혼자하기 힘든 녹색생활을

환경청이 조사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1987년도에 이미 91% 이상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서울시민의 환경의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은 95.5%가 서울환경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좀처럼 나아질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천이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서울시민의 87.7%가 환경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에서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생활태도에 변화가 오고 그 결과 실천행위를 유발해 내는 것은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힘이다. 외국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환경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피해자로서의 책임은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를 살맛 나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시작으로서 최근의 모범적인 사례 중에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 12월 6일에 서울 YMCA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이 은평구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살기 좋은 은평만들기 구민토론회>이다. 이 행사는 지역단체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쾌적한 내고장 만들기 작업을 했다는데 있다. 그리고 그 진행방법도 돋보이는 것이었다.

이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은평지역사회를 위한 전문가의 기조발제와 은평구민의 설문조사 발표 그리고 시민제안이 이어지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시민제안은 환경, 지역문화, 청소년교육, 생활안전, 사회복지 등의 5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 토론회의 특색은 각 부문의 발제를 순수주민대표들이 담당한 점인데 이들은 주부들로서 은평구의 생활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 이 토론회는 주민들만의 의견발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자체의 각 분야 담당공무원들이 해당부문의 자치체 정책과 의견수렴의 뜻을 격의 없이 개진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종래의 행정부의 권위적이며 방어적이며 은폐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향후 지역사회 만들기에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일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민자치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은 지역주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종래의 행정에 관한 한 주민은 수혜자의 자리에 아니면 통치대상, 관리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방

소집단(이웃, 직장, 학교, 취미모임, 또는 교회·성당·사찰 등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5~8명으로 팀을 구성한다)활동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의 진행기간은 6개월이다. 내용은 첫달-쓰레기줄이기, 둘째달-물아껴쓰기, 셋째달-에너지절약하기, 넷째달-자가용덜타기, 다섯째달-자원절약하기, 여섯째달-종합평가하기로 되어 있다. 이 운동은 녹색생활의 실천방법을 연구·실천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스스로 행동목표를 세운다.

이 운동은 유엔 환경 계획(UNEP)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의 과정에 대한 자가평가에 따라 일정수준의 성과를 거둔 가족에게 지구시민권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이 운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한국사회교육원 744-3964)

2) <아나바다 운동>은 물건을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꾸어쓰고, 다시쓰는 자원절약운동이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자원다소비국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물건을 살 때부터 시작된다.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 내구성이 강한 물건선택, 폐기시의 재자원화가 가능한 상품구입, 재생상품우선구입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폐기물 양을 줄이고(Reduce),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며(Reuse),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처리하며(Recycle), 재생상품을 구입하며(Rebuy), 고장난 것은 고쳐서 사용(Repair)하는 등의 R운동으로 서구에는 알려져있다.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품상점(Reuse Shop)을 운영하고, 자주 쓰지 않은 물품의 임대사업을 하거나 공동구입·공동사용·공동관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운동이다.

싼값으로 물건을 파는 미국의 알뜰시장(Thrifty Shop),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앞마당장터(Garage Sale), 쓰던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교환시장(White Elephant) 등도 이 운동에 속하는 형식이다.

우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바자회나 벼룩시장과 다른 것은 임시로 열리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상점으로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물건의 가격도 원칙에 따라 부여되고 운영은 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수익금은 주로 자선사업에 쓰여진다.

자치개막과 더불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행정(삶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한 선언을 선언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의 행정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닌 경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행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참여방식은 지역사회여건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

환경보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은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 대상은 생산업체일 수도, 정부시책일수도 이웃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은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다.

21세기의 삶의 질의 향상은 가해자로서는 소비억제, 피해자로서는 살맛 나는 내고향 만들기, 파수꾼으로서는 환경오염을 감시하며 기업과 정부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정책을 촉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인3역을 제대로 해내게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몫이다.

삶의 질이란 개인에 따라 지역특성과 국가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향후 우리의 삶의 질 향상 노력에 큰 변수로서 작용할 남북의 통일문제 그리고 오늘의 북한의 현실문제에 대해 현명한 대처 및 대비가 필요하다. 독일통일에서 보여진 선례에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

Ⅲ. 오늘의 시민운동

오늘의 세계에서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시민사회의 저해요인 또한 엄청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현실파악이 중요하다.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은 사회의 불평등문제와 시민들의 공익의식 결여로서 공동체사회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의 역사는 길지 않다. 때문에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우리의 권리확보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모든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과 관련한 문제로서 경실련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일을 계기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각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체재 외의 시민운동이라고 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유일한 대안은 시민사회와 건전한 시민운동이라고 식자들은 말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이 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80년대를 통해 성장한 시민사회라고 생각된다. 87년의 민주화투쟁, 최근 노동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부당성에 대해 보여준 풀뿌리 문제제기, 그리고 활발한 자생적 시민운동단체 등은 시민 혹은 시민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 김철규, 고려대, 1997)」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오늘의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권위(정당성과 신뢰성)와 힘(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YMCA는 우리 나라에서의 시민운동의 효시로 부각되어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인재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이념과 존재양식도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론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시민운동에서 보여지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3월 24일자 한국일보의 <시민단체의 자기개혁>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자.

이 논설은 80년대 후반 기존사회운동의 명백한 한계 속에서 제도정치권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시민단체들은 90년대 초반 한때 우리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소수의견, 반대견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의 시민단체들의 입지확보는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시민단체의 사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형상의 덩치는 좀 커졌는지 모르지만 위상은 반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나라에서 시민운동의 위상제고는 시민단체들의 자기개혁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①대중성의 제고 ②내부문제(재정확보, 양질의 인력 충원 및 유지)의 해결 ③조직과 구성원의 도덕성 견지 ④민주적 운영 등을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벌써부터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오랜 전통과 재정기반을 갖추고 있는 YMCA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YMCA의 자성은 YMCA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이행보다 기관유지를 위한 수익성 사업운영에 치우치고 있는데서 운동성이 약화되고 기관화해가는 경향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YMCA와 자매기구인 YWCA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의 눈에 비친 최근의 환경운동·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운동전개에 있어서 자발적인 회원 대신 유급 실무자에 의한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사결정과 운동전개과정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운동의 원리는 파급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오늘의 운동양상은 일과성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크다. 그러한 운동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첫째 많은 수의 실무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막대한 경상비 지출로 운동의 순수성·도덕성 유지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운동체의 기구가 확대되면 내부업무집행의 활로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참여기구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게 되어 무보수 참여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사업에 불과하다. 둘째로 운동체들이 저마다 사건은 많이 터뜨리는데 비해 실제로 거둬지는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또하나의 문제는 사회운동이 소수의 명망가 위주라는 것이다. 매스컴에 비친 행사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같은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회운동의 취지는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으나 같은 몇 사람이 모든 운동의 얼굴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운동이란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많은 새 사람들이 가담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과정을 거쳐 시민에 의한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란 있을 수 없다.

민간단체의 신뢰성 문제가 심판의 자리에 오른 차제에 시민운동은 반성을 거쳐 자기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전 YMCA 사무총장인 강문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운동의 체중을 줄이고 거품을 빼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한다.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시민운동의 도덕성, 신뢰성 확보, 재정충당 방안,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시민운동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Ⅳ. 시민운동으로서의 YMCA의 과제

YMCA는 시민운동으로서만이 아닌 기독교운동, 에큐메니컬운동, 청년운동, 회원의 운동, Volunteer운동, 농촌운동, 지역사회운동, 국제적운동 등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운동체이다.

YMCA는 본래 소집단 활동(개미군단 형태의 저변확대 필요)을 토대로 이루어진 운동체로서 시민의 민주훈련의 장의 기능도 담당해온 것으로 안다.

오늘날 YMC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단한 것이다. 창설 이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쌓아놓은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지도력 그리고 영향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자산을 YMCA만을 위해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바로세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충남지역 YMCA가 각기 지역사회에서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양식 개혁운동 (소비억제)
- 에코팀운동 ┐
- 에코가족운동 ┘ 소집단활동 지역사회조직 구축
- 아나바다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

② <살맛 나는 내고장 만들기> 운동
- 삶의 질 지표
- 내고장 환경지도
- <지방의제 21> 수립
- 내고장 녹화운동 (영국의 Ground Work 등)

③ 지방행정에 참여하자.
- 지방정부에 주민위원회 구성요구
- <주민회의> 또는 <민회> 등의 대정부 민간주체구성
- 행정부의 주민참여는 Partner로서
- 서울의 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 설치운영-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④ 도·농간의 공동체회복운동을 전개하자.
- 유기농산물 직거래(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운동을 겸해서)

⑤ 선거국면에 바로 대처하자.
- '97 대통령 선거
- '98 지방자치제 선거
- 2000년 총선

⑥ 통일국면에 바로 대처하자.
- 굶주리는 동포문제(YMCA전국연합에서 하고 있다)
- 민족동질성회복
- 불시에 찾아올 통일 대비

V. 맺는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막강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YMCA가 기독교정신으로 결단만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었던 좋은 피조물들이 오늘날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창세기 6:7)"라는 하느님의 한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 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에서 YMCA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한국인으로서의 책임, 지구인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느님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Ⅰ. 21세기와 시민운동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세대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 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세계는 21세기를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②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며 ③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한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체계는 공적영역(Public Sector)으로서의 정부, 민간영역(Private Sector)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제3영역(The Third Sector)으로서의 시민사회의 3개 영역이 어울려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자율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이며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이들 3자간의 동반자관계(Partnership)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회는 더불어 사는 정신이 깃든 공동체사회가 되는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공동체사회는 분권화된 지방자치제에서 보다 실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6.27 지자제 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시민자치의 개막은 지방화시대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 의미가 크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과연 시민사회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는 것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일의 중요과제가 된다.

1995년 1월에 발표된 우리 나라의 〈세계화 구상〉을 위한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는 새로운 가능성과 폭발적인 위험이 교차하는 전환기라고 하고 있다. 21세기는 인류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처럼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높은 때는 없었다.

우리는 현재 백척간두에 선 경제, 정치, 사회, 환경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상황 극복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문제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게만 내맡길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Ⅱ. 21세기의 삶의 질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은 물량적인 것이었다. 21세기의 삶은 쾌적한 환경과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질의 문제이다. 세계는 지금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

를 향해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 환경 보전〉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89.8%와 전문가 95.3%(한국환경기술개발원 '96.3)가 오늘의 세계문제로 환경문제를 꼽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나라의 국정목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환경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오늘의 생산과 소비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구증가, 도시화, 빈부의 문제 등이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지구환경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파수꾼이다.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이룩한 우리를 지배해온 핵심가치는 더많이, 더빨리, 더편리하게였다.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세계자원을 소모하는 다소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적·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존속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는 오늘날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과소비 자제 문제가 지구환경을 위한 생활양식의 제일 큰 덕목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과소비자제운동과 관련한 통상국들의 수입규제라는 반발에 대해 단지 민간단체의 운동으로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가해자로서는 과소비를 자제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공동체사회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체들이 각기의 지역사회를 살맛 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틀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 - Agenda 21〉에 의거한 〈지방의제 21〉이다. 이것은 필히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각 행위자의 실천의지가 담겨야 하고 그 실천지표는 행위자 각자가 설정해야 한다. 이 작업은 〈환경자치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민자치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은 지역주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종래에서처럼 주민이 행정의 수혜자 또는 통치 및 관리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개막과 더불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행정(삶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한 선언을 선언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이 책임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에게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은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 대상은 생산업체일 수도, 정부시책일 수도, 이웃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은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다. 지

구시민 모두는 누구나가 1인 3역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것을 제대로 해내게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몫이다.

향후 우리의 삶의 질 향상 노력에 큰 변수로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오늘의 북한의 현실과 남북통일문제이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및 대비가 절실함을 지적해둔다.

III. 오늘의 시민운동

오늘의 세계에서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시민사회의 저해요인 또한 엄청나게 존재한다.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현재 시민의 권리확보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모든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제한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과 관련한 문제로 경실련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일로 시민단체들은 제각각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체제외의 시민운동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유일한 대안은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라고 식자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오늘의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권위(정당성과 신뢰성)와 힘(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3월 24일자 한국일보의 〈시민단체의 자기 개혁〉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보면 80년대 후반 기존사회운동의 명백한 한계 속에서 제도정치권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시민단체들은 90년대 초반 한 때 우리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소수의견, 반대의견을 보완하는 장치로서의 시민단체들의 입지확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시민단체의 사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형상의 덩치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위상은 반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위상제고는 시민단체들의 자기개혁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①대중성의 제고 ②내부문제(재정확보, 양질의 인력 충원 및 유지)의 해결 ③조직과 구성원의 도덕성 견지 ④민주적 운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제들이다. 최근의 환경운동·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유급 실무자에 의한 엘리트 중심의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데 있다. 그로 인해 운동체의 의사결정과 운동전개과정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은 많은 수의 실무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에 따른 막대한 경상비 지출 문제로 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성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자기 유지를 위한 하나의 사업체에 불과하다는 자성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의 시민운동·사회운동이 소수의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 소수 명망가들이 모든 시민운동을 대표하고 있다는데 있다. 운동이란 파급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과성 행사로 이어지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시민운동에는 많은 시민이 가담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과정을 거쳐 시민에 의한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신뢰성 문제가 심판의 자리에 오른 차제에 시민운동은 반성을 거쳐 자기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전 YMCA연맹 사무총장인 강문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운동의 체중을 줄이고 거품을 빼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한다.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도덕성·신뢰성 확보, 회원에 의한 재정충당방안 마련, 전문인력확보 등으로 시민운동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Ⅳ. 시민운동으로서의 YMCA의 과제

YMCA는 시민운동으로서만이 아닌 에큐메니컬운동, 청년운동, 회원의 운동, 발란티어운동, 지역사회운동, 국제운동 등의 본질을 가지고있는 운동체이다.

오늘날 YMC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단한 것이다. 창설이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축적한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지도력 그리고 영향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자산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YMCA는 지금까지 소집단 활동(개미군단 형태의 저변조직)을 토대로 이루어진 시민운동으로서 시민의 민주훈련의 장의 기능을 다해오고 있다. YMCA는 바로 이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시민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비롯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생활양식개혁운동(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는) ②살맛 나는 내 고장 만들기 운동 ③지방행정 참여 ④공동체사회 회복운동(도농간, 계층간 등) ⑤선거국면 바로 대처 ⑥통일국면 바로 대처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막강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YMCA가 기독교 정신으로 결단만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21세기의 삶의 향상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에서 YMCA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한국인으로서의 책임, 지구인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YMCA는 하느님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받는 사람: 정형영 총무 (홍성 YMCA)
전송 0451-32-3360

보내는 사람: 박영숙
전화 02-571-5809 전송 02-574-2845

메시지: 여러가지 계획되었던 사정으로 부득이 강연요지만 보내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포함 3쪽입니다.
뵐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강연요지)

박 영 숙 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Ⅰ. 21세기에 대한 특성과 전망

① 세계화, 정보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 지향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

② 20세기는 경제의 세기 →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생명위협요인: 전쟁, 빈곤, 인권탄압, 환경

③ 지방화 추세

국가주권 약화
국제기구, 민간단체, 경제기구 등 사회조직 영향력 강화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역할 중시
건전한 시민사회, 시민운동 형성 필요

④ 삶의 질 향상 요구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평화문제 (삶의 질 침해요인 제거)

Ⅱ. 21세기의 삶의 질 (물량 → 질)

① 쾌적한 환경

환경의 심각성 인식:
국민의식조사('96.3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 일반 89.8% 전문가 95.3%
서울시민의식조사('96.11녹색서울시민위원회) 95.5%

환경문제의 원인: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 인구증가, 도시화,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
지구시민의 환경친화적 생산, 소비양식 개혁
과소비 억제 = 경제위기 극복 + 지구환경보전

문제의식과 실천문제: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소집단 운동 전개 (에코팀 운동, 아나바다 운동)

② 공동체사회 회복

살맛 나는 내고장만들기 <지방의제 21> 수립
행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운동체 네트워크 (주민회의 구성)
국가차원의 형평성있는 지역발전문제

③ 남북한 공동체사회 회복
통일문제데 대한 시민합의 도출
불시 통일에 대한 대비

Ⅲ. 오늘의 시민운동

경실련의 언론심판을 계기로 본 시민운동 반성
시민운동의 자기개혁과제
제3영역으로서의 시민운동 활성화
시민운동의 저해요인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운동의 과제

Ⅳ. 시민운동으로서의 YMCA과제

① 생활양식 개혁운동 (소비억제)
에코팀운동 ┐
에코가족운동 ┘— 소집단활동 지역사회조직 구축
아나바다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

② <살맛나는 내고장 만들기> 운동
삶의 질 지표
내고장 환경지도
<지방의제 21> 수립
내고장 녹화운동 (영국의 Ground Work 등)

③ 지방행정에 참여
지방정부에 주민위원회 구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주민회의> 또는 <민회> 등 대정부 민간주체 구성
입법기능에의 주민참여 활성화

④ 도·농간의 공동체 회복운동
농어촌살리기
도·농간의 유기적 관계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

⑤ 평화운동 (생명운동)
인권문제
빈부격차
사회부정부패문제
반핵문제 (핵의 평화적 이용 등 포함)

⑥ 선거국면 바로 대처
'97 대통령선기
'98 지방자치선거
2000 총선

⑦ 통일국면 바로 대처
북한동포의 당면문제
민족동질성 회복

제2회 충남지역YMCA이사,위원 협의회

주제 :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일시 : 1997년 3월 29일(토) 오후3시
장소 : 홍성온천 5층 한백식당

<진행순서>

15:00-15:30 등록 및 접수
15:30-16:00 개회식
16:00-17:00 주제강연 /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강사 : 박영숙(한국환경정책연구소장,서울의제21추진협의회의장)

17:00-18:00 운동제안
제안 1 / 21세기 삶의 질 지표만들기 운동(남부원 서울Y시민사업부장)
제안 2 / 충남지역YMCA 연대와 협력방안(고광성 이사장)

18:00-19:00 저녁만찬 및 휴식
19:00-20:00 공동토론(운동제안 1, 2)
20:00-20:50 친교회 및 폐회식

<알림과 바램>

1. 본 협의회에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각 YMCA별로 등록처에 참가자를 접수시켜 주시고 이름표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녁식사시 여러지역 YMCA이사,위원님들과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신분은 등록처에서 주차티켓을 발부해 드립니다.

▣ 개회식순 15:00-16:00

사회자 : 전병구 부이사장(서산YMCA)

묵상 / 사회자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환하게 트입니다.
당신께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의 앞길을 곧게 닦아 주십니다.
야훼여, 당신의 재판으로 열리는 그 길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깊이 그리워하며, 이 몸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는 이 마음, 아침이 되어 당신을 찾는 이 간절한 심정
당신의 법이 세상에 빛나는 때 세상 주민들은 비로소 정의를 배울 것입니다.(레위기 26장7-9절)

한국YMCA목적문 낭독 / 다같이

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도 / 이충근 이사장(천안YMCA)

찬송 / 다같이

1. 옳은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민이 의의길 /이길따라서 살길을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길
2. 주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민이 돌아갈 /길과진리요 참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따르라 화평왕
3. 놀라운 이소식 알리어라 세계만민을 구하려 /내주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길
4.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백성을 구한길 /모두나와서 믿어라 온세상이 마침내 이진리에 살겠네

<후렴> 어둔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예수의 나라 이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말씀 / 이철규 목사(홍성감리교회, 홍성YMCA이사)

인사 및 소개 / 서산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 기타지역 참가자

축사 / 이종근 군수

알림과 바램 / 사회자

축도 / 이남경 목사(홍성중앙감리교회, 홍성YMCA이사)

▣ 폐회식순

사회자 : 주광섭 이사(홍성YMCA)

묵상 / 다같이

말씀 / 사회자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깨우쳐 주고 힘이 되어 줄 사람이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합니다. 혼자서는 살길이 막막 할 수 밖에 없지만, 여럿이는 든든합니다. 혼자서는 막지 못할 원수들도 여럿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삼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전도서4:9-12절)

정리인사말 / 각 지역YMCA대표자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같이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박영숙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21세기의 대한 특성과 전망

① 세계화, 정보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 지향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

② 20세기는 경제의 세기 →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생명위협요인: 전쟁, 빈곤, 인권탄압, 환경

③ 지방화 추세

국가주권 약화
국제기구, 민간단체, 경제기구 등 사회조직 영향력 강화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역할 증시
건전한 시민사회, 시민운동 형성 필요

④ 삶의 질 향상 요구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평화문제 (삶의 질 침해요인 제거)

II. 21세기의 삶의 질 (물량 → 질)

① 쾌적한 환경

환경의 심각성 인식:
국민의식조사('96.3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 일반 89.8% 전문가 95.3%
서울시민의식조사('96.1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95.5%

환경문제의 원인 :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 인구증가, 도시화,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 :
지구시민의 환경친화적 생산, 소비양식 개혁
과소비 억제 = 겨계위기 극복 + 지구환경보전

문제의식과 실천문제 :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소집단 운동 전개 (에코팀 운동, 아나바다 운동)

② 공동체사회 회복

살맛 나는 내고장만들기 <지방의제 21> 수립
행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운동체 네크워크 (주민회의 구성)
국가차원의 형평성있는 지역발전문제

③남북한 공동체사회 회복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합의 도출
불시 통일에 대한 대비

Ⅲ. 오늘의 시민운동

경실련의 언론심판을 계기로 본 시민운동 반성
시민운동의 자기개혁과제
제3영역으로서의 시민운동 활성화
시민운동의 저해요인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운동의 과제

Ⅳ. 시민운동으로서의 YMCA과제

① 생활양식 개혁운동 (소비억제)

에코팀운동 ┐
에코가족운동 ┘ — 소집단활동 지역사회조직 구축

② <살맛나는 내고장 만들기> 운동

삶의 질 지표
내고장 환경지도
<지방의제 21> 수립
내고장 녹화운동 (영국의 Groud Work 등)

③ 지방행정에 참여

지방정부에 주민위원회 구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주민회의> 또는 <민회> 등 대정부 니간주체 구성
입법기능에의 주민참여 활성화

④ 도·농간의 공동체 회복운동

농어촌살리기
도·농간의 유기적 관계(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

⑤ 평화운동(생명운동)

인권문제
빈부격차
사회부정부패문제
반핵문제 (핵의 평화적 이용 등 포함)

⑥ 선거국면 바로 대처

'97 대통령선거
'98 지방자치선거
2000 총선

⑦ 통일국면 바로 대처

북한동포의 당면문제
민족동지성 회복

21세기 지역사회 만들기운동 : 삶의 질 지표 만들기운동

-시애틀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부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I. 삶의질 지표 만들기의 의의

지금 우리사회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결과 파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빈부의 격차와 상대적 빈곤감, 경쟁의 심화와 함께 파괴된 사회연대성, 사회적 소속감의 해체와 윤리적 토대의 붕괴, 위기적 상황에 치달은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의 악화, 청소년범죄와 일탈의 증가, 농촌의 황폐화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제반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발주의의 깊은 후유증이 만연해있는 실정이다.

경제개발 지상주의가 지배하던 지난 30여년간 우리사회에서 이른바 '발전'을 측정하던 지표들, 이를테면 GNP, 주택보급율, 승용차보급율, 도시화율 등은 개발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이러한 개발시대의 지표들은 더 이상 시대적 적합성(Relevancy)을 갖지 못한다.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시민사회의 요구(need)가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식자들이 예측하는대로 곧 다가올 21세기는 환경주의, 문화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쾌적성(amenity)과 시민적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풍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평가하는 잣대가 변화해야 하며, 새로운 지표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한 대응전략으로서의 의의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대기업의 관점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와 지구촌의 단일시장화라는 풋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는 시민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장벽의 철폐, 각종 규제와 제한의 철폐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무한경쟁을 제 1의 논리로 내세우는 세계화의 냉혹한 흐름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적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II. 삶의 질 지표만들기 운동의 주요개념

삶의 질 지표만들기 운동은 몇가지 주요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변화되었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시민사회(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need)-잠재된 요구를 포함하여-를 탐색해내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내에 살아 움직이는 삶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잘 읽을수 있는 감수성(sensitivity)일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 지표(indicator)는 이렇듯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 즉 시민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탐색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찾도록 이를 잘 매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민들이 시(市) 또는 지역사회의 미래상을 그리고 설계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가 완전히 보장될 때, 시민들의 책임과 협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거꾸로 시민들의 잠재된 새로운 요구(need)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정(process)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시민사회 공동의 민주적 토론을 통한 지표의 개발, 지표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형성이 중요하다. 넷째, 합의된 지표를 모니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시민적 실

천과제를 도출한다. 이는 곧 시민사회 스스로의 실천과제와 정책과제로 대별될 수 있다.

III. 시애틀의 사례: Sustainable Seattle Indicator

"한 사회가 그 사회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그 사회집단의 가치와 집단적인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국민소득에만 매달리는 사회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지, 거리가 안전한지에 더 신경을 쓰는 사회는 전혀 다르다. 시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지표를 선정한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일이며, 진정으로 민주적인 발상이다." -시보고서 서문에서-

'지속가능한 시애틀 지표'(Sustainable Seattle Indicator)는 시애틀 시(市)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We define it as "long-term cultural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health and vitality.")

이 프로젝트의 발단은 1990년 11월 1일 지구의 내일을 위한 연합(Global Tomorrow Coalition)이 후원한 시민포럼이다. 이 포럼에서 시애틀의 각계 각층의 시민대표들은 도시공동체의 장기적인 복지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여러 가지 제안 중 시애틀의 총체적인 사회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 포럼을 '지속가능한 시애틀 네트웍'으로 명명하고 모임을 계속 유지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이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1년 2월, 지속가능한 시애틀 네트웍은 30명의 자원봉사자 그룹을 구성(지표작성팀)하였으며, 이 볼런티어그룹이 실시한 각종 연구조사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시애틀 네트웍은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해 사업가, 환경단체, 시와 군의 정부대표, 노동자, 종교단체, 특정이익집단, 교육자, 학생, 사회운동가 등을 시민패널에 참여토록 권면하였다. 이들은 자주 모여 지역사회의 어떤 영역과 요소들이 지표에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여섯달 동안의 분투 끝에 시민포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자원소비량 * 교육 *경제 *교통 *자연환경 *건강 *사회환경 *문화 및 오락 *인구 *공동체 참가비율 등 10개의 지표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를 개발, 총 40개의 지표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참조)

초기 자원봉사그룹이 생각한 지표활동의 기대효과로는 1) 삶에 질에 대한 학습의 효과, 2) 지표가 장기적 경향성을 드러내줌 3) 지표가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설명해줌
4) 장기적으로 개념을 정착화 5)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됨 6) 행동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 등이었다.

또한 여기서 좋은 지표란?

1)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성에 관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무엇(something)을 반영해야 하고,
2) 확실하여 (valid sign)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일 만해야 하며,
3) (지역)언론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어야 하고,
4) (특정 지역내에서) 통계적으로 측정가능해야, 다른 지역과 비교가능해야 한다.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거나 측정수단이 존재해야

지표측정활동으로는 1993년에 40개 지표 중 20개 지표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며, 1995년에 총40개 지표에 대한 현황보고서(Status Report)가 나왔다.

**야생연어(Wild Salmon): 알을 낳기 위해 회귀하는 자연연어의 수

하천유역 건강성의 지표인 야생연어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1) 개요(Description)

연어는 역사적으로 경제자원, 수변유역의 환경지표였다. 연어의 수는 강과 수역의 환경의 건강성을 반영한다.

(2) 정의(Definition)

-지표의 구체적인 설명(세다강과 베어천(Bear Creek)의 연어수)

-통계수치의 근거자료, 지표조사의 경위 설명

(3) 해석(Interpretation)

-지표측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1978년 이후 붉은 연어는 74%, 은송어는 81% 감소, 연어감소추세가 분명하다. 북쪽 푸켓 사운드 지역에서 서식하는 71종의 연어 중 12 종이 "건강이 나쁜" 상태로 밝혀졌고-.....

(4) 평가(Evaluation)

지표측정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해석(연어숫자의 급격한 감소는 지속가능성의 저하, 수중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당장의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한 연어의 급격한 감소는 멈추지 않을 것.)

(5) 관련성(Linkages)

회귀하는 자연연어의 수는 경제(관광, 레크리에이션, 음식생산) 및 환경과 긴밀히 연관되어있다. 연어는 넓은 범위에 걸친 인간활동에 민감하다. 그 사례들---. 연어에 대한 우리의 부주의한 보호책임(stewardship)은 -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Ⅳ.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1)신민포럼의 구성: 시민사회(혹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을 대변하도록 시민포럼을 구성한다.

2)지표선정을 위한 토론모임의 활성화: 시민포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미래상(2020년)에 대한 비젼을 만들고, 새로운 지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지표의 적합성(relevancy)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모임을 활성화한다.

3)각 지표별 모니터(측정) 그룹 구성: 각 지표별 혹은 지표영역별로 모니터그룹을 조직하고, 이 그룹이 상시적인 모니터를 담당하게 한다.

4)정기적인 지표모니터 계획 작성: 매년 혹은 매2년마다 정기적인 지표모니터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표모니터 계획을 작성한다.

5)지표별 모니터활동 및 보고회 (시민포럼 개최)

-지표모니터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 대책토론, 시민실천과제 도출, 정책제언 및 정책참여운동

-지표별 네트워킹(해당지표와 관련된 모든 기관 - 연구소, 정부 및 비정부기관, 주요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성)

충남지역YMCA 연대와 협력방안

고광성 / 홍성YMCA이사장

1. 연대와 협력의 요청

-. 국민국가의 권력이 약화되고 민간, 시민운동단체의 역할 증대
-. 민선 지역자치시대와 다불어 지역시민운동의 태동 요구 분출
(공주, 논산, 예산, 대천, 당진, 청양 등)
-. 광역단위 YMCA운동 과제 설정과 대응 요청-충남권 시민운동네트웍 구축
-. 충남지역 YMCA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교육활동 필요

2. 현행 충남지역YMCA 연대와 협력 경험

-. 충남지역YMCA이사,위원 협의회 1회
-. 충남지역YMCA실무자(간사,교사)연구회 : 96년 간사연구모임6회, 아기스포츠단 공동연수2회
-. 96년도 충남지역 고교YMCA 연합수련대회 (120여명)
-. 6.27지방선거시기 공선협활동 : 도지사 초청토론회

3.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제안

-. 제안1 / (가칭) 충남지역YMCA협의회 구성
각 YMCA 이사장, 총무 연석회의로 연 2차 정례화
-. 제안2 / 충남지역 회원조직간(청소년/대학/청년 등) 연대활동 활성화와 지원
고교Y 연합수련대회, 대학Y 수련대회, 농촌활동, 청년Y연합체육대회,등반대회 등
-. 제안3 / 현행 충남지역YMCA이사,위원협의회, 실무자연구모임 강화

4. 신규YMCA창립에 박차를 가하자

-. 현재 충남지역15개 시군중 창립3지역(서산,천안,홍성), 준비위1개(아산). 지회1개(청양)
-. 충남지역 YMCA신규창립을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신규YMCA창립전략 수립
-. 매2년마다 1개 신규YMCA창립을 목표로 지원지역 선정
-. 창립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방안마련 :
각YMCA 1년결산액의 1% 적립원칙, 신규창립지역 1,000만원 지원
-. 창립지역 실무지도력 파견체계 마련 :
1년간 실무파견 지도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5. 맺음말

-. 연대와 협력의 시대, 고립은 퇴보를 의미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방안으로 YMCA신규창립의 조직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

Seattle 사례/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지표

주요목록 - 6월, 1993

다음의 40여가지 지표들 - 지역참여과정을 통해 개발된 100여가지의 다양한 목록중에서 선정된 - 은 이 보고서 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훌륭한 지표로서의 기준에 합장하기 때문에 자료개발 및 발전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처음 (*)표의 20여가지 항목들은 상세하게 연구된 자료들이며, 나머지 자료들은 계속 연구될 것입니다. 궁금하거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Sustainable C/O Metrocenter YMCA, 909 4th Ave. Seattle WA 9810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
  - * 연어가 회귀하는 지역의 생물의 다양성
  - * 오염지표도에 의한 연중 청정공기질의 수
  - · king county(지역)의 잃은 표토량
  - · king county에 남아있는 습지 면적
  - * Seattle 시민의 여행자에 대한 친절성
- 인구 및 자원
  - * king county의 전체인구(연간성장률 포함)
  - * 1인당 식수 소비량
  - * 연중 1인당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양
  - * 1인당 소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BTV)
  - · 1인당 인구밀도 및 사용범위 (거주지, 상업지역, 공간, 대중교통수단, 자연공간 등)
  - · Washington에서 생산되는 음식량, 음식 수출 및 수입 양
  - · 긴급사태 대비 현황
- 경제
  - * 최고 10위권내의 기업의 고용비율
  - * 최저 노동임금당 작업시간
  - · 인종 및 성차별로 인한 실직 및 용기 저하
  - · 인종 및 성차별로 인한 개인 소득 차이
  - · 1가구당 평균 저축율
  - · 재생이 가능하거나 지역자원에 대한 경제적 신뢰도 (개발위한 특별 지표임)
  - * 빈곤한 어린이의 비율
  - * 생활수준의 차이
  - * 1인당 의료비 지출
- 문화 및 사회
  - * 평균이하의 낮은 체중으로 태어나는 유아비율 (소수민족에 의한 차이 포함)
  - ·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교사진의 인종적 다양성
  - · 초등 및 중등학교의 1주일당 예·체능 시간
  - · 학교활동에 참가하는 부모나 보호자 비율
  - * 청소년 범죄율
  - * 공공기관 단체 행사에 대한 청소년 참가율
  - · 고등학교 졸업할 9학년 등록 학생배율 (인종, 성별 및 수입(소득) 수준에 의한 차이)

* 지방의원 선거 투표율
* 성인 교양 정도
  - 이웃의 이름을 알고 지내는 일반 시민의 평균수
  - 사법부의 형평법상의 대우 (개발위한 특별지표임)
  - 알콜 및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격리수용 비용.
  - 원예(농사)를 하는 인구율
* 도서관 및 공공기관 이용율
* 예술행사의 대중 참여도
  - 자선단체에 자원봉사하는 성인인구 비율
  - 개인에 대한 자신감